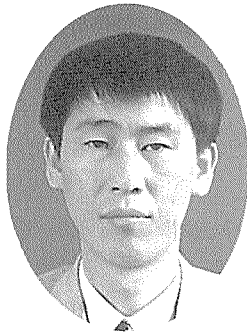


# 에너지절약과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김철안

〈 한화에너지 기획실 업무팀 과장 〉

**지**난 3월 20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 구조를 고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과 전기·가스요금을 OECD 비산유국 수준으로 인상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무역수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추상적이고 간헐적으로 제시되었던 그간의 정책방안들이 구체화되고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고유가정책에 대한 활발한 찬반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다.

정부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는 면에서 석유제품(주로 경유) 가격 인상으로 귀착될 고유가정책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른 면도 있지만 그간의 진행되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유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석유정책의 근간은 안정된 석유수급과 가격 안정이었다. 특히 2차에 걸친 석유위기 이후 걸프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가격과 수급상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요 증가를 초래하여 '90년 대비 '96년 석유소비는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더우기 총에너지소비 중 석유의존도는 60%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저유가 정책을 반성해 보고 석유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에너지 산업구조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수지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전환에도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의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몇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가격수준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외국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OECD 비산유국과의 단순비교로 우리의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하철 등 대체대중교통수단의 여건이 취약하고 난방의 등경유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에서의 고유가 정책은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의 부담만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유가 정책 수립시 소득 수준까지 고려하여 일반소비자가 수용가능한 적정한 목표가격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에 앞서 사회 전체적인 과소비행태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제조업 중 약 40%가 에너지 다소비형 기초소재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이며, 이 부문이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70%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단위 생산액당 에너지 소비량(에너지 원단위)도 일본의 두배 정도로 에너지 이용효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이런 현상은 그간 저유가에 기인한 에너지 의존형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양적 확대 위주의 공업화 과정에서 저부가가치성 산업구조로 형성되었다는 데에 있으며, 이는 유가인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라는 과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격인상에 앞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보급과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의 산업구조가 장기간 유지될 것인 바, 기존 재래산업부문에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가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세째로 가격인상 방법 및 조성재원 활용상의 문제이다.

소비절약과 사회간접자본 재원조성등을 목적으로 그간

여러 차례 가격 인상이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관련세금 또는 부과금 인상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연말 휘발유 교통세 인상 이후에 나타났듯이,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담은 늘었지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에 따른 조성재원의 용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교통대책, 사회간접자본 확충, 에너지절약 기술·시설개발 보급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등 특정부문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만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격 인상과정에서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동안 실시된 여론 조사를 보면, 일반소비자는 세금인상에 의한 가격인상과 원가 상승에 의한 불가피한 가격인상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도 비난의 화살이 정유사로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제품가격만 올림으로써 정유사만 배불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금인상을 통한 고유가 정책의 근본 취지와 그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정유사도 자율적 가격조정여지가 좁아지는 만큼 원가상승에 의한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석유정책의 한 축으로서의 가격안정기조를 전환하여 이제는 에너지절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정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세부시행방안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하에서 고유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라는 단선적인 정책에 앞서 우리 산업구조를 점차 고부가가치화 하는 방안이 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